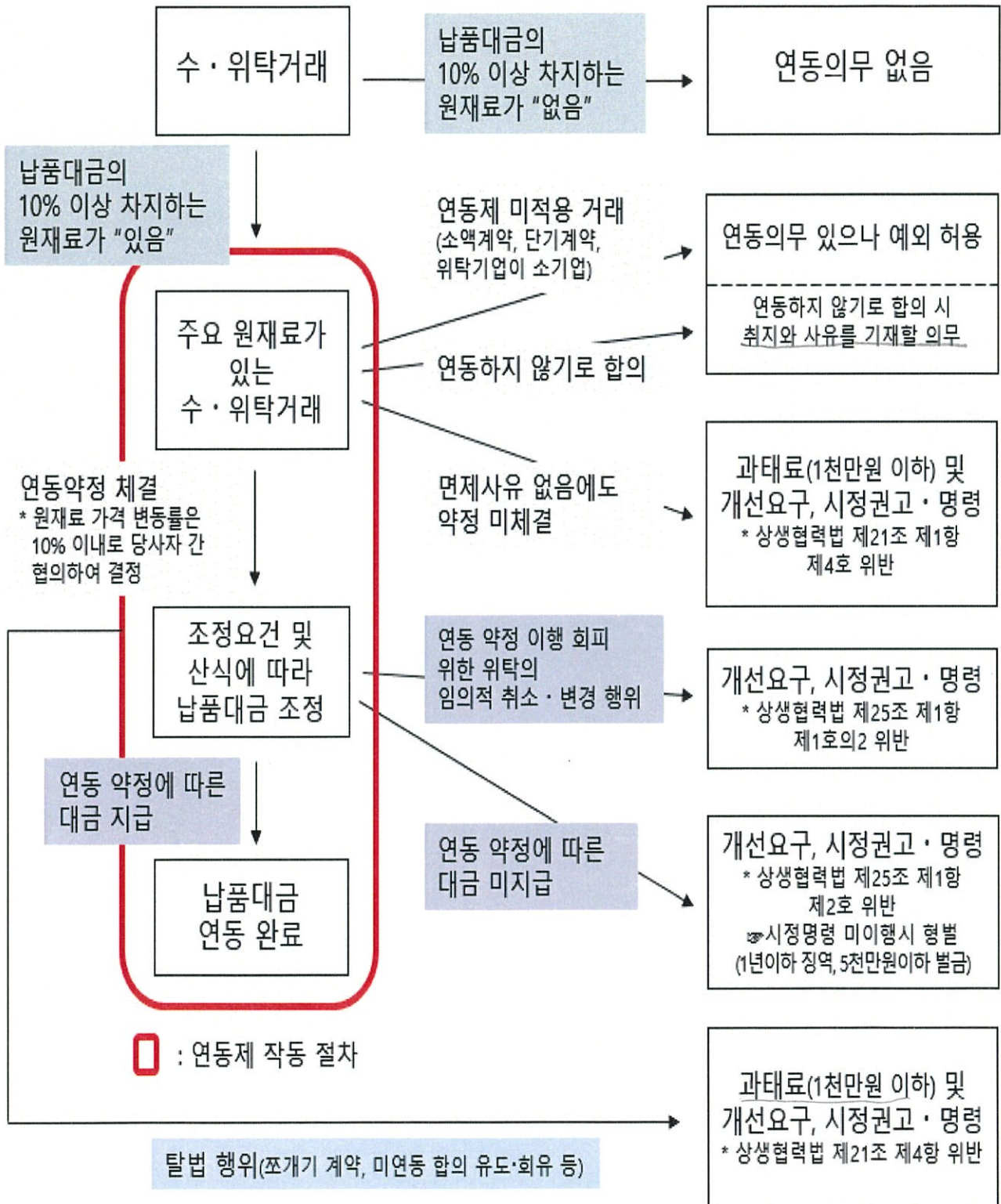


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주요 내용

- ① **(도입방식)** 주요 원재료*가 있는 모든 수·위탁거래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되, 일부 예외 허용
 - *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% 이상인 원재료
 - ①소액(1억원 이하)계약, ②단기(90일 이내)계약, ③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, ④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*한 경우를 예외로 허용
 - * 다만, 연동하지 않은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기재
 -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 금지, 연동계약 이행 회피 방지를 위해 위탁의 임의 취소 금지
- ② **(기재사항)** 기업간 자율협의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
 - 연동할 물품의 명칭, 주요 원재료명(대금의 10% 이상 차지), 원재료 가격 지표, 연동 산식 등을 협의하여 기재
- ③ **(연동방식)** 조정 요건을 협의로 정하고, 충족 시 대금 조정 (상승+하락)
 - 조정 요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되¹⁾, 구체적 내용은 자율협의로²⁾
 - * (조정 요건) 10% 이내의 범위에서¹⁾·쌍방이 협의하여 정한²⁾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
 - 기준지표의 상승·하락을 확인 후 조정 요건 충족 시 산식에 따라 대금 조정
- ④ **(제재)** 별도 신설은 최소화하고, 기존 상생협력법의 제재조치 활용
 - 연동대금 미지급, 위탁의 임의 취소 등은 기존 제재조치* 활용
 - * 개선요구, 시정권고·명령, 공표 등 → 연동대금 미지급 시정명령 미이행 시 형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
 - 탈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(신설, 1천만원 이하)
- ⑤ **(지원)** 연동제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, 연동지원본부 지정 등
- ⑥ **(시행시기)**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(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)

붙임 1

납품대금 연동제 흐름도



붙임 2

상생협력법 중기부안과 민주당안의 비교

	구 분	중기부안	민주당 당론 법안
유사점	상승/하락의 연동 여부	상승/하락 모두 조정 (주요 원재료 가격이 '변동' ... 납품대금을 '조정')	상승/하락 모두 조정 (주요 원재료의 가격 '변동' ... 납품대금을 '조정')
	연동조건 미기재 시 제재	1천만원 이하 과태료 (위탁기업)	1천만원 이하 과태료 (위탁기업)
	지원	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지원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등	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, 납품단가연동지원기구 설치
차이점	주요 원재료	납품대금에서 10%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중 협약하여 정한 것	납품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
	조정요건	10% 이내에서 합의하여 정한 원재료 가격 변동률	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% 이내에서 정한 비율
	예외사유 규정	예외 있음 (소기업, 소액·단기 계약, 미적용 합의시)	예외 없음 (모든 수·위탁거래)
	표준계약서 작성 의무	규정 없음	작성 의무 있음 (위탁기업·수탁기업)
	표준계약서 미작성 시 제재	규정 없음	5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(위탁기업·수탁기업)
	연동대금 미지급 시 제재	시정권고·명령, 벌점,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(위탁기업)	5천만원 이하 과태료 신설 (위탁기업)
	시행시기	공포 후 1년	공포 후 3개월